

##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정미애\*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민활동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시민활동에서 운동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참여 개념의 의미 변화이다. 이는 시민사회 내의 활동이 주로 사회적 참여 혹은 서비스 제공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기인하는 면이 많지만, 이와 맞물려 정부차원에서도 시민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를 정책실시(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 국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른 하나는 시민활동의 주된 활동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일본의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특히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기반한 소그룹의 풀뿌리 시민활동단체가 중핵을 이루고 있으며, 주로 생활에 밀착한 가치를 추구하는 주민자치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 특히 주부들이 활동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일본 시민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1980년대 「일본형 복지사회」의 전개에서 1990년대 「참여형 복지사회」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참여’ 개념의 변화를 정부문건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운동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위상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의 여성운동을 개관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의 추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주제어: 일본, 시민사회, 여성, NGO, NPO, 복지사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일본연구팀 연구원

## 1.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시민운동과 시민참여’에 대하여 시대를 경계짓는 새로운 조류가 탄생했다. 이른바 ‘참여’ 개념이 혁신자치체의 정책전개와 더불어 제기되면서 정치영역에서 일반사회의 구성원리에 까지 과급되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냉전구도의 종식과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시민운동에도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1970년대의 참여론에서는 ‘시민운동’이 키워드였고 ‘시민활동’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민운동 대신 시민활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여론에 있어서도 시민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활동이라고 하면, 「자기실현을 목표로 한 자발적 행위」를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은 시민활동에 포함될 것이다. 다만 시민운동과 시민활동을 구별지어 말한다면, 시민활동이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시민운동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須田春海 2002: 149, 154). 따라서 시민운동은 정치성, 이데올로기성을 갖는다.

‘시민운동’과 ‘시민활동’은 다시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적 참여는 주로 정책형성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에 대한 참여에 중점이 놓여 있는 반면에, 사회적 참여는 정책실시과정에 대한 참여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노먼 존슨(N. Johnson)은 사회정책에 대한 정치적 참여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라고 하고, 또 다른 참여형태를 ‘서비스제공에서의 참여’라고 표현하고 있다(Norman Johnson 1981: 74).

일본의 경우, 시민운동은 국제적으로는 냉전구도의 종식, 국내적으

로는 혁신자치체의 쇠퇴와 더불어 운동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시민활동으로 점차 전환해가기 시작했다(辻村みよ子 2002: 182-183). 일본의 시민운동의 운동형태가 시민운동에서 시민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민활동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시민활동에서 운동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참여 개념의 의미 변화이다. 이는 시민사회 내의 활동이 주로 사회적 참여 혹은 서비스 제공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기인하는 면이 많지만, 이와 맞물려 정부차원에서도 시민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를 정책실시(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 국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른 하나는 시민활동의 활동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일본의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특히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기반한 소그룹의 풀뿌리 시민활동단체가 중핵을 이루고 있으며, 주로 생활에 밀착한 가치를 추구하는 주민자치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 특히 주부들이 활동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일본 시민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1980년대 「일본형 복지사회」의 전개에서 1990년대 「참여형 복지사회」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참여’ 개념의 변화를 정부문건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운동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위상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의 여성운동을 개관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의 추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 2. 「일본형 복지사회」에서 「참여형 복지사회」로

### 1) 「일본형 복지사회론」의 등장 및 전개<sup>1)</sup>

일본은 196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복지국가’를 정책목표로 내걸고 복지정책의 확충에 주력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정부 스스로도 ‘복지원년’이라고 불렀던 1973년 석유위기를 맞이하여 재정이 악화되면서 복지정책은 선진국의 필요조건으로서의 플러스 심볼에서 재정악화의 주범이라는 마이너스 심볼로 바뀌게 된다. 1975년에는 「미키(三木) 수상에의 사적 제언」이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무라카미 야스스케(村上泰亮) 외 6명에 의해 간행된 『생애설계계획-일본형 복지사회의 비전』에서는 벌써부터 신자유주의의 일본적 모델로서 ‘일본형 복지사회’라는 개념이 제시된다.

일본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1981년 3월 임조가 발족하면서 더욱 구체화된다. ‘증세(增稅)없는 재정재건’을 목표로 내건 임조는 1983년 3월까지 행재정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5차에 걸친 답신(答申)을 제출했다. 임조는 행재정개혁의 기본이념으로서 국내적으로는 ‘활력있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증대’를 제시하였다.

‘활력있는 복지사회’란 “반드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

1) 「일본형 복지사회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미애, “일본의 복지다원주의화와 NPO의 성장,” 명지대학교 일본문제연구소, 『일본연구』제 9호 (2001)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를 수정·요약한 것이다.

만 서구형의 고복지·고부담의 큰 정부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활력있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경제사회가 갖는 민간의 창조적 활력을 살려 적정한 경제성장을 확보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과 동시에 “가정·지역·기업 등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온 일본 사회의 특성은 금후에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개인의 자립·자조 정신에 입각한 가정과 이웃,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대를 기초로 하면서 효율성 있는 정부가 적정한 부담하에 복지의 충실을 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담수준을 배려하면서, 현행 제도에 있어서 불합리의 시정, 효율화, 체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수익자부담과 볼런티어 활동 등 민간의 힘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臨調·行革審OB會 1987: 131).

‘활력있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 임조의 신자유주의 이념은 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제도의 수정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복지예산의 삭감은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본인부담 증대와 국고부담의 삭감으로 구체화되었다. 임조의 복지개혁은 1982년의 노인보건법 개정에 의한 ‘노인의료무료화제도의 폐지’를 시작으로 하여 1983년 생활보호법 개정, 1984년 의료보호법 개정, 1985년 아동수당의 개정, 1986년 연금보험의 개정 등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신자유주의 노선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고령 인구의 증가와 낮은 출생률에 대한 위기감, 이에 따른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대 그리고 거품경기가 끝나면서부터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 경제불황으로 인한 만성적 재정적자와 구조조정하에서 사회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사회복지 체제가 요구되면서 사회복지공급에 있어 ‘참여형 복지사회’를 내걸고 공사역할분담과 민간부문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게 된다.

## 2) 「참여형 복지사회론」으로의 전환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고령화의 진전과 출생률의 저하에 덧붙여,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세수(稅收)와 사회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나아가 기업수익의 악화 속에서 기업복지의 확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형 복지사회론」이 제기되게 된다.

1989년에는 개호서비스 시설의 정비와 인력양성을 내용으로 하는 골드플랜이 책정되었고, 1995년에는 골드플랜을 대폭 상향조정한 신 골드플랜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개호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이 시행되었다. 골드플랜, 신 골드플랜, 개호보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도들은 ‘개호비용의 사회보험화’로서 기존의 가족개호에 의존해 왔던 ‘일본형 복지’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복지의 하향수정’에 시종했던 19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일본형 복지사회’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현재 18.5%로 18.2%(2001년)인 이탈리아와 더불어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사회이다. 특히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일본의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이다.<sup>2)</sup>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제출한 ‘일본의 장래추계인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10년에는 22.5%로 20%를 넘어서는 유일한 국가가 될

2)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에 달하는 소요년수(倍化년수)를 보면, 독일이 40년, 이탈리아가 61년, 프랑스가 115년 걸린데 비해, 일본은 1970년 7.1%에서 1994년 14.1%로 24년만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여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망이며, 2015년에는 26.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인구 4명 당 1명 이상을 노인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인구지수를 보면, 1950년 8.3에서 1970년 10.3, 1990년 17.3, 2000년 25.5로 고령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소자화로 인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에는 노년인구지수 35.2, 2015년에는 42.2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3)</sup>

한편 일본에서는 급속히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가 있는 세대(世帯)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의 일반세대수 4,678만 세대 중 65세 이상의 친족(고령 친족)이 있는 일반세대는 1,504만 세대로 5년 전과 비교해 17.7% 증가했고, 일반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0년의 26.4%에서 1995년 29.1%, 2000년 32.2%로 점차 상승하여 일반 세대의 1/3에 가깝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10년 동안 고령친족이 있는 일반세대의 추이를 가족유형별로 보면, <표 1>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단독세대」는 1990년의 162만 세대에서 2000년 303만 세대로, 10년 동안 1.9배로 증가했다. 또한 핵가족세대 중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는 마찬가지로 222만 세대에서 398만 세대로 1.8배 증가했고, 이 중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세대」는 137만 세대에서 283만 세대로, 10년 동안에 2.1배 증가했다. 또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는 1.9배,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는 1.7배 증가하여 핵가족의 증가도 현저하다. 반면에 「기타 친족세대」는 10년 동안 530만 세대에서 520만 세대로 감소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흐름 속에서 가족에 의존한 고령자 개호는 이

3) 일본 총무성 통계국 통계센터 홈페이지. [www.stat.go.jp/data/guide/5-3-1.htm](http://www.stat.go.jp/data/guide/5-3-1.htm)(검색일 2003. 03. 09)

<표 1> 세대의 가족유형별 65세 이상 친족이 있는 일반세대수의 추이

세대의 가족유형	상단은 일반세대수(단위 1,000세대) 하단은 비율(%)			증감율(%)	
	1990	1995	2000	1990	1995
				1995	2000
65세 이상의 친족이 있는 일반세대	10,729 (100.0)	12,780 (100.0)	15,045 (100.0)	19.1	17.7
1. 친족세대	9,096 (84.8)	10,564 (82.7)	11,994 (79.7)	16.1	13.5
(1) 핵가족세대	3,801 (35.4)	5,162 (40.4)	6,798 (45.2)	35.8	31.7
① 부부로 이루어진 세대	2,218 (20.7)	3,042 (23.8)	3,977 (26.4)	37.1	30.7
이 중 부부 모두 65세 이상	1,372 (12.8)	2,025 (15.8)	2,830 (18.8)	47.6	39.8
②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826 (7.7)	1,146 (9.0)	1,568 (10.4)	38.7	36.9
③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757 (7.1)	975 (7.6)	1,253 (8.3)	28.9	28.5
(2) 기타 친족세대	5,295 (49.4)	5,402 (42.3)	5,196 (34.5)	2.0	-3.8
2. 비친족세대	10 (0.1)	14 (0.1)	19 (0.1)	36.2	35.4
3. 단독세대	1,623 (15.1)	2,202 (17.2)	3,032 (20.2)	35.6	37.7
(참고) 일반세대총수	40,670	43,900	46,782	7.9	6.6

자료: 「平成12年 國勢調査」

일본 총무성 통계국 통계센터 홈페이지 <http://www.stat.go.jp/data/guide/5-3-3.htm>(검색일: 2003. 3. 19)

미 한계에 도달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요개호 고령자는 2010년에는 390만 명, 2025년에는 52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에 와상(臥床) 고령자 및 치매성 와상 고령자는 170만 명, 요개호의 치매성 고령자 30만 명, 허약 고령자 19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2002년에 요개호자의 재추계를 통해 2007년에 요개호 고령자가 이미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개호비용의 사회보험화’와 더불어

어 동시에 진행된 것이 개호서비스 공급단체의 다원화이다. 일본 정부는 복지다원주의화의 중심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기관·사회 복지시설 등에 의한 서비스의 서포트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강조하면서 복지 커뮤니티에서의 NPO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에는 이른바 NPO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이 성립되었다. NPO법의 성립은 일본사회에서의 NPO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법적으로도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00년 4월부터는 개호보험을 실시하면서 민간기업과 NPO법인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개호보험의 지정사업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시장부문과 자발적 부문까지도 포괄하는 복지다원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sup>4)</sup> 일단 외형적으로는 이른바 ‘참여형 복지사회’를 지향점으로 하는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 3) 정부 문건을 통해서 본 ‘참여’의 의미

본 절에서는 1993년 4월에 나온 후생성(현 후생노동성) 고시(告示) 「국민의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 지

4) 복지다원주의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Ely & Sama 1996; 주성수 2000: 113에서 재인용). 첫째,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생산자에게 행정이 위탁방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저비용으로 해결된다. 둘째, 복지다원주의는 정부에 의한 다원적 복지서비스 공급주체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부책임의 중앙집중화 정책에 부합된다. 셋째,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에 대한 선택의 폭과 기회가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급자간의 경쟁으로 인해 수요자중심의 공급체제로 발전된다. 넷째, 복지다원주의는 일반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시민이 단지 수동적인 복지수요자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복지의 공동생산자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주체성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다.

침」(이하 「지침」)과 같은 해 7월의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지역복지전문  
분과회의의 「볼런티어 활동의 중장기적인 진흥방책에 대하여」(이하  
「진흥방책」), 2000년 12월에 교육개혁국민회의가 발표한 「교육을 바  
꿀 17개의 제안」(이하 「제안」)을 통해 이들 문건에서 제기하고 있는  
‘참여형 복지사회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sup>5)</sup>

우선 「지침」은 고령화의 진전, 가족형태 및 부양의식의 변화, 자유  
시간의 증대, 생활의 질이나 정신적 여유의 증시 등을 배경으로 사회  
복지분야에서 볼런티어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비영리민간단  
체에 의한 자발적인 복지활동의 급속한 진전이 보이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① 자주성의 존중, ② 공적 서비스의 역할분담과  
연계, ③ 지역복지의 종합적 추진, ④ 복지커뮤니티 만들기의 네 가지  
를 들고 있다. 나아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입  
시나 취직 시에 볼런티어 활동실적을 평가하거나 볼런티어 표창의 장  
려와 같은 복지활동에 대한 이해의 증진, 계발보급활동, 볼런티어 활  
동에 참여하기 쉬운 기반의 정비, 복지공사나 소비생활협동조합 등의  
주민참여형의 복지서비스공급조직,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사회공헌활  
동에 대한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진흥방책」은 「지침」에서 더 나아가 “공적 시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상부상조 등에 의해 복지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참여  
형 복지사회의 구축”(厚生省社會・援護局 地域福祉課 監修 1993:  
100)을 제언하고 있다. 「진흥방책」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과반수가

5) 「참여형 복지사회론」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伊藤周平. 1996 「社會福祉にお  
ける利用者参加: 日本の福祉政策と参加の理念」에서 많은 부분을 원용해 왔음을  
밝혀 둔다.

볼런티어 등의 형태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복지사회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厚生省社會・援護局 地域福祉課 監修 1993: 106).

「지침」이나 「진흥방책」의 이러한 논조는 1995년 7월에 제출된 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 권고 「사회보장체제의 재구축: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21세기의 사회를 목표로」(이하 「권고」)에 계승되어 있다. 「권고」는 “사회보장을 지탱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국민 모두”라고 규정하고, “국민은 사회보장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획(參畫)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社會保障制度審議會 1995: 16).

한편 2000년 12월에 수상의 사적자문기관인 교육개혁국민회의가 발표한 「교육을 바꿀 17개의 제안」이라는 최종보고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원에 대한 봉사활동의 의무화가 제안되기도 했다.<sup>6)</sup> 또한 이 보고에서는 교원면허장 취득희망자에 대하여 「7일간 개호 등의 체험」이 부과되기도 했다(中村陽一・日本NPOセンター 編 2001: 74).

「지침」이나 「진흥방책」, 「권고」, 「제안」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참여형 복지사회론」은 복지국가론과 복지사회론에 대한 관점이나 볼런티어의 위상 등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참여’의 의미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형 복지사회론」에서 ‘참여’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에 의한 복지원조 활동이나 서비스공급활동, 혹은 볼런티어 활동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라는 사고는 결여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참여형 복지사회론」이 제기된 배경에는 개인이나 가족의 자조(自助)에 의거하는 「일본형 복지사회론」의 정책이 벽에 부딪치고,

6) 중간보고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1년간 봉사활동의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최종보고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이 축소된 것이다.

공적인 복지서비스의 정비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민간시장이나  
볼런티어의 활동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공적인 책임과 부담을 회  
피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문건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시책이 아니라 일종의 제안서  
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볼런티어 활동을 복지서비스 공급  
을 위한 인력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국민에게 '의무화'하는 발상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시민사회의 발전이  
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는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일본 시민사회의 현황을 고찰하고, 시민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위상에 대해 개관하고 있다.

### 3. 일본 시민사회의 발전과 여성운동

시민의 자발적 사회참여라는 의미에서 일본 시민사회의 발전을 사  
회운동과 연관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몇 시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정진성 2001: 19).

첫째, 1960년대 말~70년대 초까지의 시기로서 노동운동과 학생운  
동이 고양되었다가 제도화되어간 시기이다. 둘째, 1970년대 중반 이후  
의 시기로서 혁신자치체의 대두로 인해 이를 중심으로 성장과 효율이  
라는 국가적 가치에 의한 폐해에 대하여 분배와 복지를 중심으로 하  
는 시민사회적 가치가 전면에 등장한 주민운동의 시기이다. 셋째,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시민운동의 시기로서 전투적이고 체제개혁적  
인 요소가 사라지고 환경운동, 여성운동, 생협운동, 지역운동, 볼런티

어 운동 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지향가치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이나 국력신장과 같은 국가적 목표가 아니라 복지, 환경, 쾌적한 생활(amenity)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이른바 ‘생활자가치’로의 전환이 명백하게 나타나며, 운동형태에 있어서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고, 「시민활동」으로의 성격전환이 명확히 포착되는 특징을 보인다(정미애 2002: 154-155). 이상의 시기구분과 시민운동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시민운동은 주로 국내에 국한되어 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시민운동」이라기보다는 「주민운동」으로서 주로 자신들의 생활의 장(場)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의 시민운동의 특징은 공간적으로는 지역공동체 중심, 지향가치에 있어서는 생활밀착형, 운동 목표는 주민자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여성운동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기는 하나, 일본의 여성운동은 페미니즘 차원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운동주체가 여성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을 위한 운동이라기보다 여성에 의한 운동이라는 것이다. 여성 스스로가 여권(女權) 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운동의 주체가 대부분 주부들이고 여성의 시각이 주부, 어머니라는 기존의 성규범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일본 여성운동의 특징은 시민운동이 시민활동으로의 전환을 뚜렷이 드러내게 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 내에서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시민사회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볼런티어 활동에 의해 주도되고 ‘생활자가치’가 적극적으로 추구되면서, 볼런티어의 70-80%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전후 일본의 여성운동을 시기적으로 개관해 보았다.<sup>7)</sup>

전후 GHQ에 의해 어느 정도 여성의 참정권 등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자 일본의 여성운동은 노동운동과 보다 급진적인 사회운동의 여성지위 요구가 주도하게 되었다. 전후 민주화와 함께 여권단체와 좌파운동이 성해지자 GHQ는 이를 제압할 온건한 여성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전전에 국가에 의해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동원되었던 부인지역조직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좌파적 여성운동은 여성의 부덕(婦德)에 기초하는 지역조직의 엄청난 증대로 전반적으로 수위가 낮아지게 된다.

GHQ의 지도 하에 1948년 東京都 地域婦人團體協議會가, 1952년에는 全國地域婦人團體連絡協議會(地婦連)라는 중앙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1960년대에 다소 축소되기 전까지 700만 명을 포괄하는 확대를 보였다. 지역조직은 이후 소비자운동, 평화운동 등에 참여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의 하청적 사업을 담당하면서 일본의 여성운동을 보수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8년 각 학교단위로 PTA를 조직하고 전국협의회를 발족시킨 것도 GHQ의 같은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 단체는 교육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역조직으로서의 보수성을 띠고 있다.

이밖에 지역조직을 기초로 하며 여성을 주로 포괄하는 조직으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들 수 있다. 생협도 전전에 조직되어 전후에 활동을 재개했으며, 소비자운동, 평화운동에도 참여했다. 생협은 특히 1970년대 이후 환경운동 등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담당자로 변화했다.

---

7) 일본의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정진성, 『현대 일본의 사회운동론』(나남출판 2001), 「제 11장 일본여성운동의 사회통합적 성격」에서 많은 부분을 원용해 간주했음을 밝혀둔다.

여성단체들은 1952년 이후의 이른바 역코스의 반동적 정책하에서 평화운동으로 활동이 모아졌으며,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교육운동, 소비자운동, 물가안정운동 등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노동운동과 평화운동이 주도하는 흐름을 형성했다.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대체로 주부 또는 어머니라는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격은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의 여성운동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60년대에는 대조직에 불신감을 가지며 보수적 편향의 지역조직에 만족하지 못한 여성들은 대조직 중심의 정치지향적이었던 종래의 운동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소그룹 운동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인 소그룹 조직은 1970-80년대를 통해 확산되었는데, 주로 주부가 운동주체였으며 운동 목표도 다양하여 물가인상반대, 식품공해투쟁, 교육운동, 보육원설립 운동 등의 생활운동으로부터 결혼퇴직제도 반대, 임금차별반대 등의 노동운동, 한일조약반대, 베트남전쟁반대 등의 평화운동에까지 확산되었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여성운동은 일본사회 전반의 조건에 규정을 받으면서 여성운동의 내적 발전의 계기를 흡수하여 새롭게 변화해갔다. 저성장기에 들어간 일본사회에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크게 약화되고, 일상생활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이른바 신사회운동이 확산되었다. 또한 여성노동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국가의 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일본형 복지정책이 시행되어 가족과 가족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적 사회분위기가 이루어졌다. 정책적으로도 자치성에 설치된 사회교육심의회는 1971년에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사회교육의 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의 연대의식 형성을 위해 여성의 불런티어 활동을 육성할 것을 제안

했으며, 1976년에는 「여성 볼런티어활동 촉진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성역할분담을 수용하는 여성 내부의 시각이 일치하면서 일본의 여성운동은 「역할분담 내에서의 주부운동」이라는 방향성 하에서 전개되었다.

이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본 여성운동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지역에 기반한 조직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전전부터 존재했던 지역부인조직은 물론이고, 다른 여성단체나 생협, 노조도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소그룹운동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일본 여성운동은 지역조직에 상당부분 규정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는 여성운동이 성역할분담론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역할분담 내에서의 주부운동」이라는 일본 여성운동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의 일본적 형태의 적응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주부들의 하나의 탈출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4. 일본 시민사회의 현황: 여성중심의 자발적 부문

1995년의 오사카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볼런티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고양은 NPO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단계로까지 끌어올림으로써 1998년 특별비영리활동촉진법(이른바 ‘NPO법’)이 제정되기에

8) 정진성 교수는 일본의 여성운동이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특성은 일본에서 자치회, 町内會 등의 지역조직이 대체로 현상유지적, 보수적 성격은 띠고 있고, 더욱이 이 지역조직들이 국가에 의해 육성되고 동원되었던 점으로 인해 일본여성운동의 보수성, 또는 사회통합성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정진성 앞의 책 322).

이른다.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500명을 넘는 대재해를 맞아 재해구원활동에 1일 6만 명,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이 전국 각지에서 개인적 혹은 조직적으로 피해지역을 방문해 구원활동을 펼침으로써 1995년은 일본의 ‘볼런티어 원년’으로 불리어진다.<sup>9)</sup>

시민사회의 발전을 나타내주는 가시적 지표로써 자발적으로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개인, 즉 자원봉사자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표 2>는

<표 2> 전국의 자원봉사활동 상황: 자원봉사자수의 추이

조사시기	단체수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수	개인 자원봉사자수	자원봉사자 총수
1985년 4월	28,462	2,699,725	119,747	2,819,474
1986년 4월	28,636	2,728,409	147,403	2,875,812
1987년 4월	32,871	2,705,995	182,290	2,888,285
1988년 9월	43,620	3,221,253	164,542	3,385,795
1989년 9월	46,928	3,787,802	114,138	3,901,940
1991년 3월	48,787	4,007,768	102,862	4,110,630
1992년 3월	53,069	4,148,941	126,682	4,275,623
1993년 3월	56,100	4,530,032	159,349	4,689,381
1994년 3월	60,738	4,823,261	174,235	4,997,496
1995년 3월	63,406	4,801,118	249,987	5,051,105
1996년 3월	69,281	5,033,045	280,501	5,313,546
1997년 4월	79,025	5,121,169	336,742	5,457,991
1998년 4월	83,416	5,877,770	341,149	6,218,919
1999년 4월	90,689	6,593,967	364,504	6,958,471
2000년 4월	95,741	6,758,381	362,569	7,120,950

주: 全國社會福祉協議會ボランティア活動振興センター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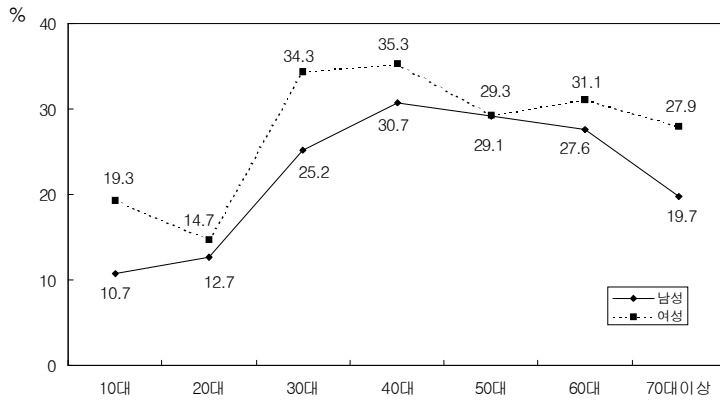
자료: 中村陽一·日本NPOセンター 編, 『日本のNPO 2001』(東京: 日本評論社 2001), p.125.

9) 豊島愼一郎, “社會的活動,” 高坂健次 編, 『日本の階層システム6: 階層社會から新しい市民社會へ』(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0), 143쪽.

일본의 자원봉사활동 상황을 자원봉사자수의 추이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가 최근 15년 동안 자원봉사단체수와 자원봉사자수 모두 198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일본 자원봉사자의 특징은 이들 자원봉사자 중 “75%가 여성회원이고, 여성회원의 46%는 주부”<sup>10)</sup>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성별에 따른 볼런티어 활동 참여율에 대한 연령대별·직업별 특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림 1>은 총무청(현 총무성) 「사회생활기본조사보고」에 따라 작성한 성별·연령대별 볼런티어 활동 참여율이다.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볼런티

<그림 1> 성별·연령대별 볼런티어 활동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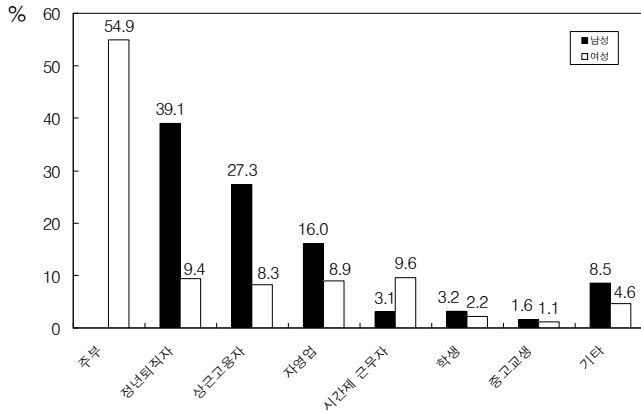
- 주: 1. 總務廳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1996年)에 따라 작성.
  - 2. 「사회적 활동」 중 「사회봉사활동」을 한 사람의 비율.
  - 3. 「사회봉사활동」이란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주민의 안전보장, 환경 정비 등 「타인을 위한 활동」의 색채가 강한 활동을 의미.
  - 4. 10대는 15~19세.
- 자료: 經濟企畫廳 「國民生活白書」(平成12年度)

10) 『朝日新聞』 1996년 8월 13일.

어 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또한 남녀 모두 30~40대의 활동이 두드러지지만, 여성의 참여율은 30대 34.3%, 40대 35.3%로, 각각 29.7%와 30.7%를 기록한 남성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2>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 불런티어 활동자 실태조사보고서」(1996년)에 따른 성별·직업별 불런티어 활동 참여율이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42%로 가장 많고, 여성 불런티어만을 보더라도 주부가 54.9%로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부는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웃과의 관계나 자녀를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고, 자녀양육이 일단락되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남성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년퇴직자가

<그림 2> 성별·직업별 불런티어 활동 참여율



주: 1. 全國社會福祉協議會「全國ボランティア活動者實態調査報告」(1996年)에 따라 작성.  
 2. 남녀별 수치는 남성 948명, 여성 3,080명 각각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상근고용자는 「회사원, 공무원, 단체직원 등」, 학생은 「전문학교생, 단과대학생, 대학생」  
 자료: 經濟企畫廳 「國民生活白書」(平成12年度)

39.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상근 고용자 27.3%, 자영업자 16.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시 말해 일본의 시민사회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곧 여성이며, 특히 주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일본 볼런티어의 성별·연령별·직업별 활동참여율을 통해 일본의 시민사회가 30-40대 주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일본의 도시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종류의 생활환경 개선운동이나 교육개선운동,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등에서 주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이나 환경운동 등에서의 주부들의 활동은 매우 두드러지며, 사회운동영역에서 주부들의 참여가 이처럼 활발한 사례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본만의 독특한 현상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Terada Ryoichi 1993; 문옥표 2001: 200).

다음은 볼런티어의 주요 활동분야를 알아보기 위하여 NPO의 구성비율과 NPO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활동분야별 법인수 및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그림 3>은 2000년 현재 일본의 NPO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0년 현재 일본에는 61만 7천여 개의 NPO가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림 3>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은 조직규모(단체수, 회원수)에 있어서 NPO 전체 중 ‘커뮤니티 조직’<sup>11)</sup>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로 다른 분야의 NPO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시민사회가 ‘생활자가치’를 지향하는 자신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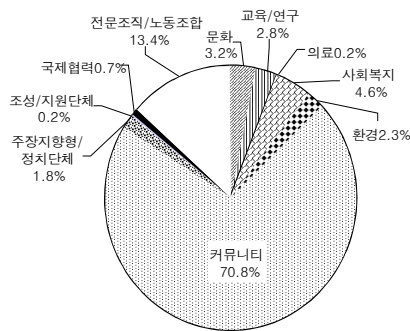
11) 본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 조직이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단체, 마을조성활동단체를 지칭한다.

밀착형 시민활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 3>은 2003년 3월말까지 NPO법에 의해 인증을 받은 10,644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활동분야를 집계한 것이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증 NPO법인의 활동분야는 「보건·의료·복지」가 59.54%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교육」이 46.31%, 「NPO의 연락·조언·원조」가 39.8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복지」분야에서 활동하는 NPO법인이 많은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보건·복지·의료분야에서의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NPO법과 개호보험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자와 NPO를 사회복지정책의 공적 파트너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미애 2002).

커뮤니티 조직과 「보건·의료·복지」분야에서 활동하는 NPO가 많

<그림 3> 일본의 NPO 구성비



자료: 「NPO 自書 2002」 p.16

<표 3> NPO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활동분야별 법인수 및 비율(2003년 3월 현재)

활동분야	법인수	비율(%)
① 보건, 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6,349	59.54
② 사회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4,938	46.31
③ 마을조성(まちづくり)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4,082	38.28
④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3,174	29.76
⑤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활동	3,032	28.43
⑥ 재해구원활동	779	7.3
⑦ 지역안전활동	902	8.46
⑧ 인권의 옹호 또는 평화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1,707	16.01
⑨ 국제협력활동	2,544	23.86
⑩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과 촉진을 도모하는 활동	1,022	9.58
⑪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활동	4,038	37.87
⑫ 상기의 활동을 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원조 활동	4,249	39.84

주: 한 법인이 복수의 활동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복수회담.

자료: 내각부 국민생활정책 NPO 홈페이지 <http://www5.cao.go.jp/seikatsu/npo/data/bunnya.html>  
(검색일: 2003. 5. 7)

은 일본 시민사회의 특징은 기술한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여성의 볼런티어 활동이 주로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유상 볼런티어로 활동하는 주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발적 부문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인력으로써 적극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과도 상응하고, 기혼여성의 취업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부들이 볼런티어 활동을 일의 한 형태로써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부의 ‘볼런티어 활동적 취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특히 1980년대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주민참가형 재가복지서비스<sup>13)</sup>는 자발적 부문의

12) 정현숙, “일본여성의 사회진출,” <http://www.ichiban.pe.kr/jun-bang/gairon/jk-zyosei.htm>  
(검색일: 2003. 5. 7)

13) “주민참가형 재가복지서비스(활동)란 지역주민의 참가를 기본으로 공사사업단, 생활협동조합, 주민자주조직 등 비영리를 조직이념으로 하는 단체가 행하는 가사원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거의 모든 활동이 주부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참가형 재가복지 서비스 공급단체의 대부분은 서비스의 제공자나 수혜자가 모두 회원으로 등록되어 상호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제공은 유료·유상(有償)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료·유상이라고는 해도 교통비나 실비를 받는 정도로 1980년대 당시는 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는 등 자원봉사자의 무상성을 둘러싸고 자원봉사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조직 및 활동의 계속성이 담보된다는 의미에서 유상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정미애 2001: 137, 139).

##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본형 복지사회」에서 「참여형 복지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의 의미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본 시민사회의 발전과정과 여성운동의 역사를 개관했다. 또한 몇 가지 현황자료를 토대로 현재 일본의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을 여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본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일본 시민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자발적 부문은 30-40대 주부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일본의 시민사회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시민활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일본의 자발적 부문은 고령화에 따른 개호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써 보건·복지·의료분야에서의 활동이 주

---

조, 홈헬프 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활동)을 말한다.” 全國社會福祉協議會, 『住民參加型在宅福祉サービス活動實態調査の概要』 1989 70쪽.

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고는 오늘날 일본의 시민사회를 고찰함에 있어서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통해 기술적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여성이 자발적 부문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생협 활동이나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여성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일본의 한 단체조사에 따르면 「다음의 각 그룹은 일본의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거의 영향력 없음’을 1로 하고 ‘매우 영향력 있음’을 7로 하여 조사한 결과, 「부인·여성운동단체」가 3.42로 총 16개의 단체분류 중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NGO·시민단체·주민운동단체」가 3.48로 하위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sup>14)</sup>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여성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시민사회가 담보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변화에 대한 비전 제시와 리더십을 결여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텐(David C. Korten)은 21세기를 NGO와 볼런티어의 세기로 규정하면서, 21세기의 발전 비전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적 정신구조의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즉 21세기에는 오랫동안 인간사회의 경제·사회 생활을 지배해온 공격적·착취적·경쟁적 측면이 강한 남성적 정신구조를 대신하여, 만물을 생성하고 가호하며 활력을 부여하는 여성적 정

14) 참고로 영향력 평가 결과를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된 단체분류부터 차례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관료(6.32), 정당(6.12), 경제·경영자단체(5.65), 대기업(5.38), 맥스컴(5.32), 농업단체(5.22), 외국정부(5.18), 국제기관(4.64), 자치체(4.37), 노동단체(4.30), 외국의 이익단체(4.11), 문화인·학자(3.93), 소비자단체(3.89), 복지단체(3.49), NGO·시민단체·주민운동단체(3.48), 부인·여성운동단체(3.42)의 순이다(괄호 안의 숫자는 영향력 평가 평균치). 辻中豊 編著, 『現代日本の市民社会·利益団体』(東京: 木鐸社 2002: 77).

신구조가 지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David C. Korten 1990). 일본 시민사회의 주된 활동자로서 여성은 여성적 정신구조야말로 21세기 발전 비전에서 중요한 핵심임을 인식하고, 21세기를 이끌어가기 위해 주부, 어머니로서의 성규범과 지역의 한계성을 벗어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장권. 2000. “국가개혁과 시민사회”.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 문옥표. 2001. “사회교육과 여성의 사회참여-지역공동체와 주부의 역할”. 『일본의 도시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진성. 2001. 『현대 일본의 사회운동론』. 나남출판.
- 정미애. 2001.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다원화-在家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고찰”.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제13호.
- \_\_\_\_\_. 2001. “일본의 복지다원주의화와 NPO의 성장”. 명지대학교 일본문제 연구소. 『일본연구』 제9호.
- \_\_\_\_\_. 2002. “일본의 시민사회와 NPO: 행정과 NPO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02년 여름호.
- \_\_\_\_\_. 2001. “글로벌화와 일본의 시민사회”. 『국제정치논총』제 42집 4호.
- 정현숙. “일본여성의 사회진출”.  
(<http://www.ichiban.pe.kr/jun-bang/gairon/jk-zyosei.htm>) (검색일: 2003. 5. 7)
- 주성수. 2000.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1. 『시민사회와 NGO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 엮음. 1996. 『일본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도서출판 한울.
- David C. Korten. 1990. *Getting to the 21st Century: Voluntary Action and the Global Agenda*, Kumarian Press.

- Norman Johnson. 1981. *Voluntary Social Services*, Blackwell, B.
- Terada Ryoichi. 1993. "Changing Characteristics of Japan's Environmental Movements since the 1970s",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伊藤周平. 1996. "社會福祉における利用者参加: 日本の福祉政策と参加の理念," 社會保障研究所 編, 社會福祉における市民参加』(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今村都南雄 編. 1993. 『第三セクターの研究』(東京: 中央法規出版).
- 河合幸尾, 宮田和明 編. 1991. 『社會福祉と主体形成 - 90年代の理論的課題』(京都: 法律文化社).
- 經濟企畫廳. 2000. 『國民生活白書』.
- 經濟企畫廳國民生活局. 1997. 『市民生活団体基本調査報告書』(東京: 社會調査研究所).
- 厚生省社會, 援護局 地域福祉課 監修. 1993. 『参加型福祉社會をめざして: ボランティア活動振興の新たな課題』(東京: 全國社會福祉協議會).
- 社會保障制度審議會. 1995. "(勸告)社會保障制度の再構築: 安心して暮せる21世紀の社會を目指して(概要)," 『週刊社會保障』第1846号.
- 杉山光信. 2001. 『戦後日本の'市民社會』(東京: みすず書房).
- 須田春. 2002. "市民活動と市民参加," 松田圭一・西尾勝・新藤宗幸 『自治体の構想 1 (課題)』(東京: 岩波書店).
- 武川正吾. 1999. 『福祉社會の社會政策 - 續・福祉國家と市民社會』(京都: 法律文化社).
- 辻中豊 編著. 2002. 『現代日本の市民社會・利益団体』(東京: 木鐸社).
- 辻村みよ子. 2002. 『市民主權の可能性』(東京: 有信堂高文社).
- 豊島慎一郎. 2000. "社會的活動," 高坂健次 編, 『日本の階層システム 6: 階層社會から新しい市民社會へ』(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中村陽一, 日本NPOセンター 編. 2001. 『日本のNPO 2001』(東京: 日本評論社).
- 山内直人 編. 2001. 『NPOデータブック』(東京: 有斐閣).
- \_\_\_\_\_ 編. 2002. 『NPO白書2002: 最新データからみた日本のNPO』(大阪大學大學院國際公共政策研究科).
- 臨調, 行革審OB會. 1987. 『臨調・行革審-行政改革2000日の記録』(財団法人)

人行政管理研究センター).

デビット コーテン 著, 渡辺龍也 譯. 2000. 『NGOとボランティアの21世紀』(東京: 學陽書房).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국민생활정책 사이트<[www5.cao.go.jp/seikatsu/](http://www5.cao.go.jp/seikatsu/)>.

일본 총무성 통계국 통계센터 홈페이지<[www.stat.go.jp/data/](http://www.stat.go.jp/data/)>.

일본 국립여성교육회관 통계정보DB<[www.nwec.jp/wcass/index00.html](http://www.nwec.jp/wcass/index00.html)>.

K C I